



정상은 교육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신속 마련을”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교권 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

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 오염수 방류’ 한·일 국장급 협의 오늘 개최

국조실 “우리 측 요구사항·기술적 제안 전달 예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오늘(25일) 열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일전에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지난 7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네 가지 기술적 제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오염수 방출이 진행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박 차장은 일본 측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지에 대한 얘기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 자리에서 100%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IAEA가(요구 사항 관련) 모양새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IAEA와 구체적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과) 수차례 주고받기식 대화가 이뤄져야 요구사항과 관련한 최종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다”며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과도한 걱정은 안 하도록 하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굳이 (일본 측의)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

대통령실 “절차 따라 추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결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 사인 국민의회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국민의회에 최종 통보했다.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철도 참사’ 12명 수사 의뢰

국조실, 충북도·행복청 관계자 등

국무조정실은 24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송을 공명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을 각각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조실은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충

북 지역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기관”이라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았고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다. 현직 주민들은 행복청이 시행한 국도 36호선 미호강 임시 독 부설 공사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행복청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 독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

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현장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충북 지역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개인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6.6%...3주 연속 하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 의뢰로 지난 17~21일 다섯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떨어진 36.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주 42.0%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0%p 상승한 59.9%로 3주 연속 올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9%p ↑), 부산·울산·경남(4.1%p ↑), 여성(0.2%p ↑), 40대(0.6%p ↑)에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강원(13.5%p ↑), 제주(10.4%p ↑), 광주·전라(6.6%p ↑), 30대(2.4%p ↑), 70대 이상(4.3%p ↑) 등에서 주로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